



평화나눔의 시선

2025.12.31. | 제25-04호

가톨릭교회의 국가-인간-생태의 통합적 평화 윤리

가톨릭교회가 바라보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 평화를 제대로 보려면 그 대척 개념인 갈등이나 폭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갈등과 폭력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으며, 인간의 삶의 여러 영역에 이미 드러나 있거나 또는 잠재하다 나중에 드러날 수 있다. 평화의 주제는 국가 간 전쟁 부재 및 집단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이고 집단 간 차별과 제도적 폭력을 없애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생태를 구축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갈등과 폭력 그리고 평화가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교회의 평화에 관한 관점을 이해하고 평화를 구현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글은 가톨릭교회의 평화에 관한 논의가 국가, 인간, 생태 세 가지를 포괄하는 통합적 평화 윤리로 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교회는 냉전기부터 국가와 주권의 책무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국가 간 전쟁의 완전 금지를 주장해왔다. 또한 불평등 해소를 통한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더해 오늘날 교회는 왜곡된 기술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엄중한 비판에 기초해 생태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의 평화 논의는 국가[평화]-인간[평화]-생태[평화]의 통합적 윤리이다.

이 글이 교회의 평화 논의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는 대신에 국가-인간-생태의 삼각구도로 설명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째, 냉전기부터 본격화된 세상의 평화 논의와 교회의 평화 논의가 중첩되기도 하는데, 위의 세 개념에 기초해 살펴보면 양자가 명확하게 대비된다. 물론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관련해서는 교회가 세상보다는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둘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대적 갈등과 폭력의 양상이 변화하는 만큼 교회의 평화 논의도 역동적이어서, 국가와 인간 위주의 논의에서 점차 생태를 포함하는 융합적 형태로 발전해 온

점을 보여줄 수 있다. 교회의 통합적 평화 윤리의 정립 과정을 밝히는데 국가-인간-생태는 분석 도구로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1. 국가간 평화: 가치 및 규범

“원자력을 자랑하는 현대에서는 전쟁이,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합리하다.” (『지상의 평화』, 127항)

“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서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국가들 간의 관계는 진리, 정의, 적극적 연대, 자유 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상의 평화』, 80항)

세상의 평화 논의에서 국가 간의 전쟁 방지는 핵심 주제였다.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강대국 정치에 의해 이들이 구속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냉전기에는 미소 등 강대국간 군비경쟁과 함께 강대국 지원하의 약소국간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여건하에서 정책결정자들에게 국가안보는 강대국 및 약소국을 막론하고 국가주권을 지키는 가치처럼 여겨졌다. 이에 세상의 평화 논의는 국가간 통합 또는 안보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초국가적인 공동체 의식은 정보의 개방적 흐름과 민주적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무튼 세상의 평화 논의는 국가안보를 염두에 둔 채 전쟁, 특히 핵전쟁 방지를 목표로 한 이른바 소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가톨릭교회는 국가와 국가주권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며 평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교황 요한 23세의 1963년 회칙 『지상의 평화』가 냉전기 교회의 평화 논의의 중요한 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칙은 미소간 핵무기 경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던 냉전의 한복판에서, 평화가 무력 균형이 아니라 진리, 정의, 사랑, 자유에 기초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같은 가치에 대한 언급은 세상의 안보공동체 논의가 정치체제의 속성이나 정체성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대비된다. 『지상의 평화』는 국제 평화 질서를 위한 윤리적 기초를 논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네 가지의 가치, 즉 진리, 정의, 사랑, 자유는 사회 생활의 모든 상호관계-개인들간, 시민-국가간, 종교단체간, 국가간 등-에 적용되는 원칙이 되어야 하지만(163항),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간 평등, 존중, 신뢰를 구축하는 원리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톨릭교회는 평화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교회는 외부 침략에 의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당 방위권을 제한적이거나 인정하기도 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에서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기쁨과 희망)』(1965)은 “전쟁의 위험이 있고 적절한 힘을 지닌 관할 국제권위가 없는 동안에는, 참으로 평화 협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 본 정부들의 정당 방위권은 부정할 수 없다”(79항)고 적었다. 즉, 정당 방위권도 무력 행사를 수반하므로 그 조건이 엄해야 하는데,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권위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과 평화적 수단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고 보았던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2023, 개정2판)는 “정당방위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에게서는 중대한 임무가 될 수 있다”(2265항)고 명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국가가 정당 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무력을 통한 정당 방위의 엄격한 조건으로, 피해의 심각성, 타 방법의 실행 불가능성, 성공의 조건, 폐해의 등가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2309항)

한편, 교회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정당 방위권이라 할지라도 극도의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즉, 교회는 정당 방위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도 방위 목적 이외의 어떤 폭력 행위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궁극적으로 전쟁의 완전한 금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다. 이는 현대전의 대량 살상 능력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 가능성 때문인 동시에 전쟁의 본질이 무차별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도시 전체나 광범위한 지역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려는 전쟁 행위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범죄로서 확고하고 명백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기쁨과 희망』, 80항)고 밝혔다. 전쟁에서의 대량살상과 무차별성은 핵무기 사용의 경험(히로시마, 나가사키)과 끊임없는 핵기술 발전의 확인(핵 및 미사일 실험)에서 드러난 바와 같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2020)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칙은 특히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언급한 정당 방위의 조건이 “지나치게 폭넓은 해석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258항). 이는 정당 방위에 관한 엄격한 도덕적 조건과 합리적 국제 기준마저 전쟁에의 길은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는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전쟁의 완전한 금지를 위해서는 “무장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상의 평화』에서는 군비경쟁의 악순환과 핵실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완전한 무장해제 상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를 운영하는 것만이 신뢰에 기초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밝혔다(111항). 냉전

기 진행된 미소간 군비통제 협정들은 실행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제도를 두기는 하였지만, 합의 내용이 양국 핵무기의 질적 및 양적 대칭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는 한계를 지녔다. 이를 지적 하듯, 『지상의 평화』는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에 의해 서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113항)라고 주장하였다.

2. 인간 평화: 개발과 보호의 윤리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며, 오로지 적대 세력의 균형 유지로 전략될 수도 없고, 전제적 지배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또 정확히 말하자면, 평화는 정의의 작품이다.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질서의 열매, 또 언제나 더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할 사회 질서의 열매가 바로 평화이다.”(『기쁨과 희망』, 78항)

“모든 인간은 품위 있는 삶과 온전한 발전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러한 기본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존엄의 기초는 환경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타고난 가치에 있기 때문입니다.”(『모든 형제들』, 107항)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온갖 형태의 공격과 분쟁은 계속 짝을 틈을 토양을 찾고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입니다.(『복음의 기쁨』, 59항)

“불평등이 있고 온전한 인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모든 형제들』, 235항)

냉전기 세상의 평화 논의 중에서 괄목할 것은, 전쟁 부재를 넘어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사라지고 사회적 부정의(injustice)가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발전시킨 점이다. 이것이 전쟁 부재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니며 근원적 문제를 다룬다는 뜻에서 “적극적 평화”라고 불리게 되었다. 적극적 평화가 국가 또는 국가주권 대신 인간 그리고 존엄성을 논의의 중심에 둔 점은 냉전기 상황하에서는 고무적인 일이었다. 적극적 평화는 전쟁부재라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인간 중심의 완전한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주목할만한 세상의 평화 논의도 평화에 이르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냉전의 종식으로 적극적 평화론이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인간안보 개념의 등장

이다.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와 대비를 이루면서, 비전통적인 갈등과 위협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인간안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다. 하나는 빈곤, 질병, 불평등의 사회적 부정의를 해소하려는 “개발에 바탕한” 인간안보이고, 다른 하나는 내전(주로 인종 및 종교갈등)에 의한 폭력과 살상에 대응하는 “보호에 바탕한” 인간안보이다.

가톨릭교회는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성을 밝히면서 “개발”과 “보호”를 동시에 포용하는 평화 윤리를 제시해 왔다. 우선 『지상의 평화』에서는 “인간은 타고난 존엄성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언급하면서(132항),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1948)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 중요한 문헌이라 보고 존엄성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간 존엄성의 가장 극단적 파괴 현상 중의 하나가 대량학살로서, 냉전기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이 사건들은 동서 이념 대결의 와중에 큰 국제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다. 주목할 것은 내전과 대량학살은 대부분 저발전과 불평등에서 기인하였으므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공정성이 보장된 “개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다. 가톨릭교회는 이 같은 보호-개발의 연관성을 직시하면서, 공권력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균형에 대처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지상의 평화』, 63항, 64항). 정치지도자들이 집단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또는 방치하면 공격과 분쟁의 토양이 되며(『모든 형제들』, 235항), 극단적인 폭력 형태가 내전이거나 대량학살이었다.¹⁾

『민족들의 발전』 회칙의 “발전은 평화의 새 이름이다”라는 결론부 표제어는 평화에 관한 교회의 상징적 선언의 하나로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저발전 사회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교회는 특히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빈곤은 그 자체로서 고통일 뿐만 아니라 이를 묵과함이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빈곤이 일정 지역에서 자원의 절대부족으로 발생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본가들이 식량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가격을 좌우할 때 수 백 만명의 저발전국 주민들은 굶주림의 고통받고 죽어간다(『모든 형제들』, 189항).

1) 나이지리아 내전(1967-1970), 방글라데시 학살(1971), 캄보디아 킬링필드(1975-1979), 엘살바도르 내전(1980-1992), 이라크 쿠르드족 학살(1986-1989), 르완다 제노사이드(1994), 보스니아전쟁 기간의 학살(1992-1995), 다르푸르 학살(2003-2005), 미얀마 로힝야족 박해 및 학살(2017-현재), 시리아 내전(2011-2024)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1967)은 선진국에 의한 원조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공적 개발 원조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회칙은 또한 “선진 국가들의 잉여 재화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후진국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원조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군비의 일부를 할당해 세계 기금 제도를 설립하자고 제안하였다.(49항, 51항) 즉, 원조를 국가 간의 지원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의한 공동선의 행위로 유도하려 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쁨과 희망』 회칙도 개발도상국에의 원조, 난민 구호, 이민자에 대한 식량, 건강, 교육, 노동에 관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84항).

3. 생태 평화: 통합적 평화 윤리의 정립

“우리는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한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139항)

“통합 생태론은 사회 윤리에서 핵심적이고 통일적인 원리인 공동선의 개념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공동선은 사회 평화, 곧 확고한 질서의 안정과 보장을 요구합니다. 이는 특히 분배 정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배 정의가 침해당하면 언제나 폭력이 발생합니다.”(『찬미받으소서』, 156항, 157항)

생태가 본격적으로 평화 논의의 영역으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냉전기 후기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은 환경과 생태를 주요 이슈의 하나로 삼기는 하였으나, 사회주의 몰락을 계기로 이들의 비판적 생태 논의는 폐달을 밟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를 목도한 좌파 지식인들의 관심의 급선회였던 셈이다. 한편, 가톨릭교회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2015)는 생태가 평화 논의의 한 복판에 자리잡게 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마르크스주의에 뿌리를 둔 지식인들은 생태 문제를 접하는데 있어서 자본주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자연과 노동을 모두 자본가의 이익창출에 종속 시킴으로써,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적 및 물질적 조건들을 파괴시켰고 자연-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려졌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생태주의 또는 생태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이들의 주장은 시장중심형, 소비중심형, 자원소모형, 리스크감수형 발전 및 생활방식을 신랄히 비판한다.

가톨릭교회의 생태 논의가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지적한다는 점에서 위의 생태사회주의와 일면 유사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교회의 논의는 기후변화, 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의 다양한 환경 문제들과 관련,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본주의 문제점만을 보지는 않는다. 교회는 획일적인 기술 패러다임과 왜곡된 인간중심주의를 중요한 생태 위기의 근원으로 본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 구체적으로 선진국-후진국 간의 불균형 및 동일한 사회 내에서의 불평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생태 위기(환경 훼손, 파괴 등)를 초래하며, 결국 이들 위기는 분쟁과 폭력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교회는 지적한다. 바로 이 점에서 교회에서의 생태 논의가 평화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생태 위기의 근원에 대해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첫째, 신이 내려준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인 기술이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되고 인간의 생활양식을 좌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107항). 이 회칙은 인간(특히 기술의 장인)이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도 아니며 기술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불행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특정한 의도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105항, 107항, 114항). 인간이 기술 진보를 바라왔으며 그 혜택을 누리 오기도 했지만, 기술 패러다임은 결코 기술 진보의 결과가 인류의 공동선을 위한 방향으로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 곡물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곡물이 인간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결정적 증거는 없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 이 곡물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곡물의 발명이 초래한 중대한 문제는, 소수의 자본가가 곡물의 대량 재배를 목적으로 농토를 매수함으로써 군소 농민들은 도시의 빈민 이주자로 전락하게 되고, 또한 남아있는 농민들조차도 번식력 없는 곡물의 재배를 위해 독점자들로부터 종자나 묘목을 구매해야만 된다는 것이다(134항).

따라서, 교회는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발명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농민, 소비자, 행정당국, 과학자, 종자 생산자, 근처 주민 등)들이 참여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솔직하고 책임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135항).

교회는 생태 위기의 두번째 근원으로서 왜곡된 인간중심주의를 지적한다. 근대 사상에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과 기술의 진보에 의해 인간은 때때로 절대적 지배자를 자처하거나 신의 경지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의 인간은 공동의 이해를 저해하며 자기 중심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상대주의에 빠지기 쉬우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희생시키며 살아가고 자연을 주변부로 여기게 된다. 교회는 환경 파괴와 사

회적 부조리, 부패를 낳는 논리가 이 같은 인간중심주의와 상대주의에 담겨 있다고 지적한다(116항, 117항, 122항).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진리 안의 사랑』(2009)은 인간 생태와 환경 생태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참된 생태론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 된다”라고 말한다(49항). 즉, 교회는 환경 생태의 문제를 기술적, 환경적 차원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 삶의 근본 문제, 즉 인간 생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우쳐 준다. 또 인간 존엄성과 삶에 대한 방식이 환경 생태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회의 생태 논의가 이렇게 인간-환경 생태적 연계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찬미받으소서』는 “통합 생태론”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위기는 동시에 환경적 위기이기도 하다. 사회제도의 건전한 것은 곧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간 존엄성의 회복 노력은 바로 자연 보호를 위한 행위로 연결된다(137항, 142항).

아무튼 교회가 비판적으로 보는 생태 문제는 부정의와 불평등이다. 환경 훼손의 원인은 선진국이 제공하고 이로 인한 재난의 피해는 저발전국, 그 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이 감당해야 하는 것, 북반부는 남반부에 “생태적 빚”을 졌음에도 차등적 책임보다는 공동 책임을 요구하는 것(52항), 일부 사회는 낭비적이고 소비중심의 초발전을 누리지만, 빈곤 지역의 개발은 매우 더딘 것(109항) 등이다.

교회의 통합 생태론은 결국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생태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시한다. 공동선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의 조건의 총화”라고 정의된다. 이 같은 자기완성의 추구에서 불평등의 해소와 분배 정의를 실현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발생한다(156항, 157항). 교회는 공동선의 성취를 위해 대화, 연대, 윤리적 결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172항). 또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안하는데, 환경 보존과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식의 타협 대신에 “발전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194항).

글을 맺으며

가톨릭교회는 국가, 인간, 생태의 세 영역 모두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과 폭력의 근원을 규명할 뿐 아니라 현실적, 종교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 교회는 이들 삼자 간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는바, 교회의 평화 논의는 통합적 평화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간 전쟁은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는 극도의 행위다. 따라서 교회는 전쟁의 완전한 금지를 목표로 하는 바,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조차 엄격히 할 것을 강조한다. 둘째, 전쟁이 아니더라도 불평등과 부정의는 사회집단(인종, 종교, 이념 등) 간 폭력을 유발한다. 교회는 공동선의 의지를 지닌 개발 원조를 통해 인간의 온전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 편향된 기술 진보와 왜곡된 인간중심주의는 환경 생태 위기의 근원이며, 인간 삶의 방식이 환경 생태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회의 통합적 평화는 국가 평화, 인간 평화, 생태 평화로 구성된다. 교회의 관심과 논의는 국가 간 전쟁부재로 시작하였지만 인간 개발과 보호 그리고 생태 위기 극복에 대한 주제로 점차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세 가지 평화 사이에 우선 순위는 없으며 다 함께 작동해야 한다.

통합적 평화의 세 영역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간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인간과 생태의 평화는 용이할 것이며, 인간 사회의 제도와 집단 간 관계가 정의롭다면 전쟁과 생태 파괴라는 폭력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이 가능하면 전쟁이나 내전에서 살상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어느 하나의 평화에서 긍정적 결과는 다른 평화로 전파된다. 반대로 하나의 비평화는 다른 비평화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

교회는 인간 존엄성의 보호라는 공동선을 위한 노력과 형제애의 실천을 발휘함으로써 통합적 평화를 성취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제2차 공의회 문헌 『기쁨과 희망』은, “개인의 행복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람들이 신뢰로써 정신과 재능의 자산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지상에서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존엄을 존중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형제애의 성실한 실천이 평화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78항). 이런 의미에서 평화는 “사랑의 열매”라 할 수 있다. <끝>